

‘尹 체포작전’ 경찰 4300여명 투입… 형사만 1100명

긴박했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압도적 경찰력, 경호처 저항 무력화 사다리 통해 1차 저지선 차벽 통과 집행시작 5시간30분만에 상황 종료 경호처 경호 받으며 공수처로 압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저지층에 가로 막혔다. 그러나 이후 차례로 저지선을 통과한 뒤 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37분께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수처와 경찰은 압도적인 경찰력을 투입해 경호처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관저 밖 기동대 3200여명·버스 160대 배치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경찰 43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된 수사관은 약 1100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팀 형사 570여명, 경찰청·서울청·인천청·경기북부청·경기남부청 안보수사대 450여명, 인천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100여명 등이다.

관저 밖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명이 배치됐다. 기동대 버스 160대도 투입됐다. 영장 집행 초반 형사기동대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 약 5시간30분만에 체포에 성공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7시28분 사다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사다리를 들고 진입하고 있다. 뉴스시

를 타고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인 관저구역 정문을 통과했다. 이후 차벽이 세워진 2차 저지선과 3차 저지선을 지나 철문 옆 초소를 통해 관저동에 진입했다.

경찰은 관저동 앞까지 공수처와 함께 진입했다. 관저동 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할 때는 경찰 없이 공수처 검사들만 참여했다.

경찰은 진입을 위해 절단기, 사다리 등의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소방장비나 인력은 동원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소방 장비 동원’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공수처 뒤쪽 입구로 진입…윤갑근 변호사 동행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공수처에 압송됐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이 설치된 청사 정문이 아닌 뒤쪽 입구를 통해 진입, 취재진의 눈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만에 수사

기관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곧바로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전 10시 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 14분 가량 지난 오전 10시51분께 정부과천중합청사 정문에 진입했다.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8개 중대 500여명이 윤 대통령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도로 통제에 나섰다. 당초 윤 대통령이 공수처 정문에서 내릴 것으로 추정됐지만, 검은색 경호 차량 7대와 흰색 미니 버스 2대는 곧바로 후문으로 향했다. 이때 일부 차량은 사이렌을 켜기도 했다.

윤 대통령 차량은 공수처 후문에 설치된 불투명한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 멈춰섰고, 이내 청사 내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의 옆모습이 짧은 시간 노출됐다.

윤 대통령을 따라 오전 9시께부터 현장에 나와 있던 경호처 직원들도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던 윤갑근 변호사 등도 조사입회를 위해 동행했다. 서울·김선욱 기자·뉴스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대통령 체포까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7일	윤 대통령, “임기포함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12월 11일	검찰 특수본, 15일 1차 출석 통보(불출석)
	12월 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12월 16일	공조본, 18일 1차 출석 통보(불출석) 검찰 특수본, 21일 2차 출석 통보(불출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및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취 불응
	12월 16일	윤 대통령, 현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검찰, 공수처로 윤 대통령 수사 이첩
	12월 20일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공조본, 25일 2차 출석 통보(불출석)
	12월 24일	윤 대통령, 현재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사건 일부 자료 공수처 이첩
	12월 26일	공조본, 29일 3차 출석 통보(불출석)
	12월 2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현재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 공조본, 서울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실패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12월 30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 31일	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헌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 임명
2025년	1월 1일	윤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 전달
	1월 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5시간30분 만에 철수)
	1월 6일	1차 체포영장 기한 종료 공조본,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윤 대통령 측, 현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1월 8일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시 재판 응할 것” 현재, 검경-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입수
	1월 12일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1월 13일	윤 대통령 측, 현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1월 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 3차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불출석 현재, 기피 신청 만장일치로 기각
	1월 15일	윤 대통령,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하기로”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강경파 체포영장·손배소·지시 불응 설득’ 통했다

공수처·경찰 체포 전략

확고한 체포 의지·세밀해진 계획 경호처내 강경·온건 분열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한 요인으로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밀화된 작전 계획, 경호처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심리 전략 등이 꼽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12일 만이다.

앞서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 일주일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당시 공조본이 5시간30분만의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온 뒤 공조본 내에서 ‘영장 집행을 강행해야 한다’는 쪽과 ‘무리’라는 주장이 엇갈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

오면서 공조본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공수처는 ‘능력 부족’을 시인하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1차 집행이 반나절도 되지 않아 중지된 만큼, 장기전을 불사하더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전날 경찰·경호처와의 3차 회동으로 경호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에도 영장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한 점도 공수처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체포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경찰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안전을 제1원칙으로 둔 가운데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경호처를 압도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 지난 10일, 13일에 이어 전날까지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세부 계획을 다져나갔다.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일선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회유’ 전략을 펼친 것도 유효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으로 경호처 내부 균열이 관측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등 경호처 내 ‘강경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산 호송해 조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언론에 밝히며 경호처 내 ‘강경파’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내 ‘온건파’에 대해서는 선처와 회유를 위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경호처 내부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분열을 유도해 단일 대오를 깨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공수처는 같은 맥락으로 경호처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몰린 경호처 내부 분열이 곧 표면화하면서 공조본은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단행했고 관저 내 1·2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한 후 별다른 물리적 충돌없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뉴스시